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한국인이 살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7월 27일은, 1953년에 정전(停戰)협정을 맺은 날이다.

한반도에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꼬박 3년 만에 정전협정이 이뤄졌다.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이 판문점에서 한국전쟁의 종지를 합의한 협정문에서 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그해 12월 13일,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때 사실상 남북 간에는 휴전을 끝내고, 종전(終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계의 전쟁사에서 무려 67년이나 휴전(休戰)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예는 없다. 이제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해야 할 때가 됐다. 하루라도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있는 한반도의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는 통일할 수 없음을 6·25전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평화적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다. 언제 어떻게 평화적 남북통일을 할 것인가는 우리 민족의 공통된 과제다. 북·중 국교 수립은 70년이 넘었고, 한중 국교 수립도 30년이 다 되어간다.

북미 간판 국교 수립이 안 돼 있다. 안 할 이유도 못 할 이유도 없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거나 전쟁을 또 하고 싶다는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통일을 원하지만, 나라를 쪼터미로 만드는 전쟁을 통한 통일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부터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몇 번에 걸쳐 진행했던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통점이 있다.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공동 번영'으로 요약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비핵

화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만난 '하노이 회담'은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다.

작년 6월 한북미 3국 정상 DMZ에서 세 번째 만났지만, 기대만큼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어느 누구도 전쟁하기 위해 만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전쟁의 승패는 국력과 비례하지 않는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손쉽게 밟을 뻔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국력은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처럼 보일 것이다. 미국의 백발백중하는 공중 화력은 저승사자와 같은 공포의 대상일 것이다. 미군의 정찰기만 떠도 식은땀이 흐르고, 1초 간격으로 찍어대는 인공위성의 사진은 숨통을 조일 것이다.

북한이 존엄을 건드린 판단지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지만, 이는 사실 절대 전쟁은 안 하겠다는 발악의 표시고, 살아도 못 살겠다는 분노의 표시였다고 생각한다.

연락사무소 폭파가 "전쟁이나? 평화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엄포 같았지만, 우리가 전단

지 살포를 못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못 이긴 척 꼬리를 바로 내렸다.

이제는 전쟁을 벌이면 한 방에 죽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불사했다면 서울이나 평택이나 오키나와를 폭파했을 것인데, 그랬다면 이미 다 끝난 것이다. 한반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끝났을 것이다. 퇴로를 봉쇄하고 상대를 공격만 하면 그 상대는 발악할 수밖에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마지막 발악. 이는 결국 핵폭탄으로 귀결된다.

북에는 수십 개의 핵폭탄이 있다고 하고, 지구상에는 14,000여 개의 핵폭탄이 있다. 한국전쟁이 또 터지면, 세계 대전으로 간다.

3차 대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나라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는 전쟁을 생각할 수는 없다.

평화를 꿈꾸야 한다. 나라가 평안한 평화의 꿈, 번영을 꿈꾸야 한다.

인류가 행복한 평화만을 꿈꾸야 한다. 한국인은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어쩌다 국운이 불행하여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결과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통일을 못 하고 정전협정 67년을 맞이했다.

우리 민족의 살길은 평화적 남북통일이며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정전(휴전)이 아닌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남북한이 체결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社說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내실 있어야

미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과 워싱턴DC에 상대국 대표자를 상주시키면서 사실상 대사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에 상주하며 주재국의 입장을 직접 타진하고, 자국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다면 최소한 양국이 서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연락사무소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이전 징검다리 기구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도 주요 의제로 다루졌으나, 회담 자체가 노딜로 끝나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연락사무소(또는 이익대표부)는 미국이 과거 적성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과정에서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과도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었다. 미국은 중국, 베트남, 쿠바, 리비아 등과 관계를 개선할 때 이 기구를 활용했다.

이런 외교사에 견주어 본다면 미 행정부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구상을 다시 검토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뉴욕에 유엔 회원국 자격으로 유엔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와 외교의 심장인 워싱턴DC에는 활동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관이 워싱턴에 입성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의 높은 고지를 향한 확실한 베이스캠프가 차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문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차기 정권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보다 관망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문제는 현상 타개를 위한 윈포인트 제안보다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좀더 숙성기간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나면 대피하고 신고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닐까 한다.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행동이 큰 재난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아마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사일 것이다.

이렇게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지금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 요즘 나의 옆에서 또 이웃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봐도 그냥 흘려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건수는 2016년 43,413건에서 2019년 40,10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19년 2,515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기능이 좋아지고 있는 요즘, 사상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대건축물의 수가 날로 증가함

에 따라 불에 탈 경우 독성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많다. 화재 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119 신고요령도 알아야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집, 학교, 회사 등 생활단위 공

간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평소 화재대피훈련을 습관화 해야 할 것이다.

불이 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 난 사실을 큰소리로 알리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면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등 대피요령을 숙달하여야 한다. 앞으로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한가지만 기억하자.

"불나면 대피하고 신고하자" 김현곤/무안 소방서 화재 119안전센터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반)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호남신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 고 직 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062) 228-2580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062) 222-2580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팩 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